

사설

조계종 종회 해산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해산 위기에 처했다.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최대 종단임을 자랑하고 있고, 한국불교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불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 나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 무슨 망신인가?

개혁종단의 대의기관으로 자처하며 출범한지 4년째지만 그 동안 중앙종회는 정말 구태의연한 모습만 연출하였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합쳐 18회를 소집했는데 그 중에서 유례가 없는 11회의 사상적 추수 미달로 유회되는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3월 17일부터 5일간 회기를 정해 소집된 제 130회 임시중앙종회도 정원이미달로 중요한 안건처리를 못한 채 유회되자, 다시 제 131회 임시중앙종회를 소집했지만 의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다. 핑계없는 무덤이아 없었지만 도저히 우리 일반종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종회의원 스스로가 권리를 포기한 것이며, 종단의 사부대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난의 화살을 막을 길이 없다. 참석하지 않은 종회의원 각자가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결여된 것이다. 직무태만이요, 자질의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중앙종회 일부에서는 심지어 해산론과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종회의 파행을 보며 우리불자들은 많은 충격을 받고 있다. 개혁종단이 출범할 당시부터 이러한 조짐과 우려를 격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종헌정비에 따라 여법하게 중앙종회가 구성되지 못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종헌에 의하면 종단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되나 그 대의입법기구인 중앙종회는 2부(비구, 비구니)대중으로만 구성되어 비구스님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가부장적 봉건체제의 유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종단내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남성중심의 이기주의가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차체에 일제 그릇된 유산인 25구본사제도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종단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각 교구별 구성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부화하여 대표자 수를 정해야 한다.

셋째, 중앙종회의 구성과 조직이 명실공히 사부대중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 김모씨와 건설업계 S사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청구소송에서 "신축건물의 높이를 15층까지로 제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교활동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만큼 건물의 높이를 제한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봉은사는 15층도 너무 높아 사찰 수행환경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전불사찰인 봉은사에는 선불당(지방문화재 64호), 관전 및 화엄경관(지방문화재 83, 84호) 등 많은 문화재가 있어 1백m안에서 "신축건물의 높이를 15층까지로 제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속박시설과 운동·오락·유흥시설 등 수도권 관광지내 기존 시설의 종류나 위치를 사업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여주 신록사, 양평 용문사, 수원 봉선사, 의정부 자재암 등 사찰관광지와 북한산·관악산공원, 정릉유원지 등 55개에 이르는 관광지에 소재한 사찰들이 심각한 환경훼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내 기존 관광지의 조성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지침을 개정,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월30일 밝혔다.

건교부가 발표한 '수도권내 관광지 개발사업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관광

건교부, 수도권 관광지개발 규제 완화

“사찰환경훼손 우려”

단지, 관광시설, 유원지, 온천지구 등 수도권내 관광지내에 설치돼 있는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상가, 주차장과 같은 시설의 종류나 위치를 사업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관광 시설을 규모 확대 없이 종류와 위치만 바꾸는데도 변경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

그러나 수도권 관광지내 사찰과 환경단체들은 관광지에 터키탕, 찜질방,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 뻔해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사찰수행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이기범

간사는 “그동안 그나마 법적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 러브호텔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무분별한 시설변경을 조장할 경우 환경관련 민원과 사찰환경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은 “6월 지자체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발표된 이번 조치는 선거용 선심행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이로인해 유흥업소의 증대 등 관광문화의 퇴폐화와 그로인한 사찰 수행환경의 훼손, 환경오염의 가중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사찰 종교활동 침해 고충건물 제한 마땅”

서울지법 봉은사관련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이흥권부장판사)는 3월29일 사찰 인근에 짓고 있는 고층빌딩이 종교활동과 경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소재 봉은사가 발원건축주 김모씨와 건설업계 S사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청구소송에서 "신축건물의 높이를 15층까지로 제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라와 민족위한 기원법회

종단협주회, 29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가 29일 오후6시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주)는 2일 이사회를 열고 대통령과 정관계, 경제계, 언론계 등

송재건 中信會 회장 회보에 사퇴성명서

조계종중앙신도회 송재건회장이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사표가 반려되자 3월27일 성명서를 발표해 거듭 사퇴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송회장은 성명에서 “종단은 일방적인 중무행정을 고집하고 있었으며, 이리다가는 군소종파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지경에 있다”고 비구중심의 중무행정을 비판하고 “종단행정에 아무런 개선의 힘이 되지 못하면서 회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행태임을 절감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송회장의 사퇴성명은 중앙신도회 2호(4월1일자 발행)에 게재됐다.



○10·27 법년의 최대 피해자와 가해자가 18년만에 만났다. 이날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10·27로 1백만명의 신도가 떨어져 나갔다'고 지적하자 전씨는 '내 책임'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10·27법년 피해자 가해자 만남 월주스님 “1백만신도 이탈” 지적 전두환씨 “내 책임입니다” 사과

10·27법년의 최대 피해자와 가해자할 수 있는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전두환 전대통령이 18년만에 만났다. 3월 28일 조계사 초하루법회에 참석한 전씨 내외가 지난해 자신의 석방에 힘써준 데 대한 보답으로 월주스님을 예방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는 인사에 이어 화제는 곧바로 10·27로 이어졌다. 전씨가 먼저 “월주스님이 당시 총무원장인 것을 이번에 교도소 가서 알았다. 재임시에 불교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괴로움을 줬는데 오히려 절에 가서 도움을 받았다”며 얘기를 꺼냈다. 10·27법년으로 그해 6월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던 월주스님은 4개월만에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전두환전권은 당시 불교계 비리척결을 이유로 전국사찰에 군인들을 투입, 3백여명의 스님들을 연행하고 56명을 구속했다. 월주스님도 보안사에 끌려가 23일 동안 고초를 겪었다. 전씨는 “노태우 보안사령관 사찰에 불순분자들이 숨어있고 부패한 스님들이 있어 조사하겠다고 해서 조용히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월주스님은 “이 일로 불교가 부패한 집단으로 일반적으로 매도됐고, 1백만명 이상의 신도가 떨어져 나갔다”며 “당시 사건에 대해 감정은 없지만, 기억은 생생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나두면 불교계에서 안아서 했을텐데 일방적인 고고를 듣고 그랬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마침내 전씨가 “어찌됐든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이니 내 책임”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성운 기자

불교문화재 3백46억원 ‘결정’

올해보수비

올해 불교문화재 보수비가 지난해보다 37%가 늘어난 3백46억4천67만6천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수비건수는 지난해 1백58건에 비해 23건이 줄어든 1백35건. 서울이 원각사지 10층석탑 보호각 건립 1건에 3억4천만원, 부산이 범어사 성보전사관 건립 등 2건에 2억2천만원, 대구가 동화사 극락전 단청보수 등 4건에 9억7천만원, 광주가 원효사 일주문 건립 3억9천만원, 경기도는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복원 등 6건에 5억9천

만원, 강원도는 원주 법천사지 정비 등 14건에 26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충북은 7건에 10억9천만원, 충남은 14건에 35억1천만원, 전북은 11건에 18억6천만원, 전남은 26건에 51억1천만원, 경북은 22건에 47억원, 경남은 22건에 1백54억4천만원, 제주는 2건에 3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내년 문화재 보수지원비에는 황룡사지 유물전시관 건립과 의안사 미륵사지 석탑 보수에도 각각 14억2천만원, 7억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성명서

-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 정부에 바란다. -

“민족 문화재 관리, 지방자치단체 이관 절대 반대한다.”
국립지방박물관 관리, 지방자치단체 이관은 곧 민족문화유산 학살 정책이요 한민족 정신(훈)의 자멸 정책이다. 또한 불교, 유교, 도교 민족종교 등 동양사상 말살 정책이다. 즉시 철회하고 대통령 취임 선서대로 민족문화의 창달책을 강구하라.

- 민족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 공동체요 민족정신(훈)은 그 민족의 영원한 생존 전리요 근길(大道)이다. 민족 문화재는 우리민족 5천년 역사상 민족 혼의 결정체요 산물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취임 선서를 통해 민족 문화의 창달을 기약했다고 선서하고 취임사를 통해 민족 문화의 세계화에 몰아야 한다면서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담겨 있는 문화적 가치는 계승 발전 시켜주겠다고 라고 선언하였다고 본다. 또 취임 전후에도 수 차례 21세기 문화 산업에 대한 대민 공약을 하여 왔다. 그런데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 및 인수위 100대 과제 중에 국립지방박물관(9개소)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는 조항에 어떤 실책하며 그대도 되는 것이 민족 문화재인가? 93년 김영삼 대통령과 문민정부도 계획하던이 오늘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 정부도 똑 같은 뜻이니 진정, 그 의의가 무엇인가? 오늘날 IMF 난국 초래도 결국 민족 특유의 민족정신문화(민족훈)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서양문물을 여과없이 수용한 결과가 아닌가? 오늘날 IMF 난국 극복은 오직 한민족 고유의 민족정신(훈) 문화를 바탕으로 했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진정 민족정신(훈)과 민족문화재가 없는 한국을 한 번 생각해 보라.
- 이에 한국불교승가회 중앙회(총회)는 3월 27일 임시총회(서울을 중앙종 수덕사)를 개최하고 민족문화재 관리,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절대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하루속히 그 정책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이다.
- 민족문화재 관리는 전 국민의 이름(세금)으로 중앙정부(국립중앙박물관)가 관리하고 창달하여야 한다. (예) 민족 문화재는 한민족 특유의 혼이 담겨 있는 위대한 정신적 결정체요 산물이기 때문이다.
- 민족문화재의 통일된 관리를 위하여서는 지자체 이관은 더욱 불가하다. (예) 모든 출토된 문화재는 국고로 귀속되며 그 관리를 국립박물관이 맡는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앙박물관이 지방박물관의 문화재 전세를 인수 및 수용 관리할 능력이 없고 또 매장 문화재 보존 및 개발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민족문화재의 지자체(민간) 이관 위탁 관리는 곧 민족문화재 유산의 학살 정책이다. (예) 종교적 편견이 심한 특정인의 관리는 고의적으로 민족 문화재를 사탕시켜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 금차 정부에서는 매장 문화재 및 문화재 유적지 분포도 제작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 버리지 않았는가? 민일 문화재 관리를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삭감 및 전액 중단해 버렸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 지방자치단체(민간)는 민족문화재를 관리할 자격과 책임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예) 민족 문화재를 여제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자격과 책임과 능력이 있는가? 예 광주 지방박물관(지방 박물관 9개소 중 하나)의 한해 운영비는 약 30억원 '97년도 임차료 수입 겨우 3천여만원, 또 민족 문화재 없는 지방 문화재 관리자가 진정 얼마나 될까?
- 민족 문화재의 지자체 이관 관리 정책은 곧 불교, 유교, 도교 민족 종교의 먹줄 끊어 놓겠다는 하나의 민족 종교 말살 정책이기 때문이다. (예) 민족문화재의 99%가 곧 5천여년간 민족 정신문화를 형성한 이들 종교 전리의 진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대한 한민족정신(훈)의 결정체가 아닌가? 국민의 정부는 종교적 편견과 특선을 버리고 갖가지 종교 편향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 유한한 권력으로 무한한 한민족 특유의 정신(훈)문화와 문화재를 함부로 다스리지 마라. 오늘 세계 3천여 문명과 종족중에 한나라(세계 150여 나라 중)를 이루고 있음은 한민족 특유의 민족정신(훈)과 5천년 민족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후도 종교적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지 말라. 기교 민족적 자질을 초래할 뿐이다.
- 민족 문화재 영구 보존을 위한 연구기관인 문화재 보존 과학 기구 및 문화재 창달 특별 기구를 설치하여 문화재 영구 보존 및 창달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라.
- 불교 유교 도교 민족종교, 종단 및 학계와 언론계, 국회 정각회, 각 정당 불교회, 신도단체 및 신도 문화재 애호가, 한민족정신(훈)을 가진 모든 국민들은 종교적 편견을 버리고 대통령결하여 민족 문화재 보존 및 창달을 위해 민족문화재 관리, 지방자치단체, (민간)이관 위탁관리를 절대 반대하며 범 종교적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 특히 문화재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계는 호혜적 차원에서 그 수호책을 강구하라.

불기 2542년(서기 1997년) 3월 27일

한국불교승가회중앙회

회장 無空 徐甲生(無量寺)

- | | |
|------------------|------------------|
| 부회장 雪雲 白雲植(祈園精舍) | 총무부장 道峰 蔡沐山(藥師寺) |
| 부회장 明鍾 金仁昌(清井寺) | 교무부장 賢岩 朴昌東(願力庵) |
| 부회장 法蓮 鄭承敬(慧承寺) | 재무부장 德峰 柳成彦(聖國寺) |
| 부회장 大輪 陳億斗(泰光寺) | 호법부장 性覺 金安夫(修德寺) |
| 부회장 道明 金順燾(大度寺) | 감사 性覺 崔仁哲(觀音寺) |
| 사무총장 法雲 李大淵(法雲寺) | 감사 妙峰 全成模(靑龍寺) |

●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4동 584-14 ● 전화 (02)904-0016

현대만평 박수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야...

737-8881